제348회국회 (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월18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행정자치부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 논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2
o 간사(최교일·장제원) 인사 ····· 2
2. 업무보고 ····· 2
   가. 보건복지부
   나. 행정자치부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 논의의 건 ····· 7

(09시34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월 18일자로 박병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배치받은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모두들 바쁘실 텐데 이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해왔던 많은 회의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준비해 온 여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국민들께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실질적이고 적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특히 특위는 항상 특위 무용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의 법률안을 마련해 보기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원래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저출산특위에 있는 어젠다들을

다섯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컨트롤타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하나 통과했는데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현장에서의 육아의 문제라든지 보육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일종의 현장간담회 같은 것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면 저희 특위가 좀 더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회한 이유는 현재 공석인 새누리당 간사와 교섭단체로 새롭게 구성된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 등 저출산 대책과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보고를 들은 후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은 위원장 명의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담아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드리면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 장관은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과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참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

1. 간사 선임의 건

(09시38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은 최교일 위원님 그리고 바른정당은 장제원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최교일·장제원) 인사

(09시40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교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새로 새누리당 간사가 된 최교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바른정당 장제원입니다.

새누리당 간사 하다가 바른정당 간사 하니까 좀 낯선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나경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진선미 간사님 또 최교일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과 함께 바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많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

2.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행정자치부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아래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고용, 주거 등 구조적 대책과 기업 근로문화 개선, 남성의 가사분담 등 문화적 대책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명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되는 초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는 전 정부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초등 돌봄 확충,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 함께 돌봄 도입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장기화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대책 강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또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위해서 기업 근로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남성의 가사분담이 일상화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문화를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대폭 활성화해서 전 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총력 대응체계를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김헌주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보건복지부 안건은 인구정책실장이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2017년도 연두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극복 대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으로 시작해서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만 초저출산 위기와 핵심 원인 그리고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대책 추진방향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 대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분야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난 3차 저출산 계획의 청년고용 대책 추진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경제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연계해 공공분야에서 빈 일자리 2만 5000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는 등 근로관행 개선으로 고용여력을 제고하고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

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액공제 인상과 기한 연장 등 원·하청 상생협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 확대 등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임금격차 완화 등 비정규직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있어서 각각 5만 명과 21만 명으로 확대 그리고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등에 대한 확대로 공급 측면의 미스매치 해소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혼부부 맞춤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평가이고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에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신혼부부 특성과 출산장려 효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거 지원의 수요를 감안하여 신혼부부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등으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확충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주택 지원 등 돌봄·고용과 연계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 지원에 따라서 자금 지원, 임대주택, 주택분양 등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지원기준 완화와 우대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기업과 가족문화 혁신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근로문화 변화가 관건입니다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실질적인 인식과 행태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고 육아·가사 부담에 있어서도 여성 집중 현상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도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근로 관행·기업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직무·임금 재설계 그리고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개선 등 유연·재택 근로의 일상적 근무형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금년 7월부터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대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기업·지역사회 아빠 육아교실 등 인식·문화 개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액을 인상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금년도 1600개까지 인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가책임보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어린이집 운영상 조기 하원 문제 그리고 초등 돌봄사업의 사각지대 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촘촘한 맞춤형 양육안전망 확립을 위해서 먼저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확충 등 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전환 확대 등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지원으로 대처가 곤란한 취약 시간대와 취약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민참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사회책임 기반은 마련했습니다만 아동·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적 투자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난임휴가제 시행 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 인상 등 다자녀·다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법원·검찰·경찰

간의 정보공유 등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다자녀 카드 도입에 대한 검토 방향에 대한 예시입니다.

검토 방향과 모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우대와 실질적인 지원 발굴·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입하고자 하는 모델은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하고 다자녀 가족 등록제 도입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자녀 가족 통합복지카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원과 같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면, 할인 등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신청부터 수혜까지 다자녀 카드로 통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 인프라 등 추진 기반 구축도 병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녀 카드 개선방안 연구를 1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력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를 계기로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이나 육아휴직 등 핵심 대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저출산 극복 전국사회연대회의를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경제계, 종교,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 각 분야에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문규 차관께서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저출산 극복 대책에 대해서 모두들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총력전을 벌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위기의식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보고받으신 것 중에 지금 다자녀 카드 도입 부분은, 사실 제일 먼저 이 다자녀 카드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분은 최교일 새누리당 간사님이신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지자체별로 다자녀 카드들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자녀 카드가 커버하는 효력이 다 달랐는데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카드와 비슷한 형태의 다자녀 카드를 도입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우리도 위원회 차원에서는 다자녀 카드에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보고 차례인데요.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출산 지도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을 들여다보면 역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출산하라고 강요해서 여성이 낳는 건 아니고요. 여성을 마치 출산의 도구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많이 받으신 것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식에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행자부는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저출산 대책에 접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출산 관련 주요 업무를 특별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보

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출산 지도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지도는 지난 7월 저출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국민들에게 지역별 출산과 양육 지원 혜택을 알려 드리고 그 외 기타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용어 등 그 표현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문가와 또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보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이 다 함께 노력해서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결혼, 주거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추진해서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행정자치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입니다.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입니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행정실장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심덕섭입니다.

유인물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배경부터 현안사항 순입니다.

1쪽입니다.

추진 배경과 방향입니다.

국내외 전문기관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고 30년 내에 1300여 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일자리, 젊은 세대 유입 등 인구 감소 대책과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6년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전 지자체에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의 종합 기획 기능을 보강하도록 지자체 전담인력 242명을 17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평가를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지자체 저출산 우수 시책 경진대회에서 1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교세 21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2018년 정부 합동평가에 저출산 극복 분야를 신설키로 하고 출산율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3쪽입니다.

공모를 통해 5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원스톱 지원센터 건립 등에 특교세 29억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대국민 엠블럼·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말씀드린 특교세 지원 이외에도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여 2017년에는 14개 시도에 39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2017년 업무 추진 방향과 계획입니다.

올해는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표에서 보시는 대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로 출산·육아 부담 경감 시책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과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도록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다자녀가정 자녀를 채용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차원의 육아 지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한 지역육아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공익사업 분야에 자

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의 경우 마을 공동 육아방 등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아파트 공동 돌봄터, 저학년부모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임신-출산-보육-보건 등 핵심 분야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스톱 지역거점센터를 확산하기 위해 특교세 시범사업으로 지역복합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출산 지역 인구 진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구 특성을 고려한 자체 진단·분석을 통해 저출산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형과 도시형 등 지역별 유형에 맞는 지역특화형 시책 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부문이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가정 양립에 있어 선도모델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단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자체 기금 조성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육아공동체 운영 등 각종 협력과제 추진에 있어 지역공동체, 자원봉사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아동 친화 도시가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인식 체감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현안사항입니다.

앞서 차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출산 지도는 지역별 출산·양육 지원 혜택과 합계출산율 등 6개의 주요 인구통계를 시군구 단위 지도로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이를 공개했으나 일부 용어 등 그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산되어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설명자료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 중으로 앞으로 보육·분만 시설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저출산특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은 12쪽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 논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 기구 구축을 위한 2개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독립 총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두 방안의 자세한 내용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전담 총괄기구 구축방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다른 별도의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 제시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질의 순서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박광온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과 김성렬 차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로서 아무튼 그렇게 연루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또 일부 직원들이 가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총 394조 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150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38%가 투자됐고요.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거꾸로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을 따져서 대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 투자 방향이나 큰 정책 방향을 정해 주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본부에서는 그 책정된 전략하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고 해외투자나 또는 대체투자, 주식투자 외에 또 대체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특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투자를 제가 강조를 죽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이따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공적연기금 운용 중의 하나인 AP6라는 게 있습니다. 7개 연기금펀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펀드는 중소기업 전용 펀드입니다. 연기금 15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매년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15%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산업의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상당 부분 대비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투자를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약 1200만 정도 됩니다—1200만 명이 납입한 연금을 30대 대기업 주식을 떠받치는 데 동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대기업 근로자는 120만 명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1200만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갖고 120만 국민이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떠받친다 이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세계 각국의 현재 연금 운용의 실태를 보면 실제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데 그것은 신흥국의 경우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공공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두 부처에서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18만 호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

임대주택의 성격,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매년 10조 원 정도를 이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두 부처 다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면서도. 그래서 재원을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게 하고, 지금 공공투자를 하려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너무나 당연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차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 또 생활, 애를 키우는 데 보육 부담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만큼 주거 문제가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미국의 경우 모기지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금융을 활용해서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또 유럽 국가들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가지고 쉽게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주택의 공급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임대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이냐가 키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금 재원을 거기에 사용할지 아니면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활용할지 또는 그중의 일부를 연금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광온 위원 연금을 그냥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요.

저는 두 부처의 임대주택 확충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성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출산대책 중에서 중요한 것이 주거 부분이고 결국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데 재원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차관님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나오신 관련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문규 차관님, '저출산, 백약이 무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안 해본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면 10여 년 동안 매년 20억씩 쓰면서 안 해 본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정책을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요양병원하고 요양기관과의 관계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계속 몰리는 현상들은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산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맞습니다.

○홍의락 위원 보면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계속 열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애를 맡길 수 있고 올 수 있는 애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양 부모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무슨 4대 보험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얘기할 때도 보면 예산 자체가 제대로, 우선순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차관님 보시기에 아동센터 문제를, 내용을 실질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지역 단위에서 저소득층의 아동들에 대한 돌봄 기능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초등 돌봄교실이 이용되고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이 끝난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소득 아동들의 이런 돌봄 기능의 전달체계로써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고 이것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을 하고 매년 그 지원액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증가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의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냥 월 얼마씩 이렇게 나눠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것을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더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지……

○홍의락 위원 차관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제가 보면 아동센터 쪽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애들을 갖다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좀……

제일 큰 문제가, 김성렬 차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동센터든 또 모든 도움을 받는 어린이들이든 복지기관들이든 지자체하고 관계가 있든 간에 서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두셔서 보고하는 서류를 줄여 주는 방안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직접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고 물론 그것에 대한 잘 반영이 되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서류를 가지고 제대로 보고하려고 하고 또 서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지자체에서도 계속 보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대책들도 문제가…… 물론 오늘 계속 보고를 하셨지만 큰 것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작은 부조리들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0조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15조 정도는 직접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6조 정도는 또 간접적인 부분이 있고 실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정책 중요도대로 이것이 예산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적으로 세밀하고 치밀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 보면 큰 것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실제 적용되고 작동되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안 해본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쓰다 보니까 잘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부분이라든가 요양병원, 요양기관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심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김성렬 차관님한테는, 지난번에 출산 지도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셨는데 실제 여성들이 그냥 임무로 애를 낳고 이렇게……

책임이 여성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낳는 게 애국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이 편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각성을 촉구드리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의락 위원 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출산 지도 부분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점을 인정을 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나 또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류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주민등록등·초본을 1년에 한 1억 통 이상을 뗍니다. 떼는데, 연초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전국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 떼서 내지 않고 정보를 그냥 공유해서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확인만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든 요양병원이든 이런 데 실제 어떤 서류들을 그 담당자들이 취급을 하는지 또 우리 엄마들이 그런 서류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보건복지부 또 행자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제발 좋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것이 연초 처음인데 부처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가능하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됐으면 부처별로 뭘 하는 건지 입체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2개 부처만 보고가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복지부차관님, 금년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예산이 총 얼마예요, 대략?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적으로는 한 26조 정도 되는데요.

○이명수 위원 26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게 우선……

○이명수 위원 정부 예산만이에요, 지방까지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방까지 포함입니다.

보육료만 10조입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하여튼 예산 집행이나…… 지난번처럼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를 그냥 묶어서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이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작년보다 그러면 더 늘어난 건가요, 또?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늘어났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저출산·고령 이것은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소위 전담 요원,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복지부 인구아동국에 한 5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이명수 위원 사무국 요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기획단이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분석평가과라는 과 단위를……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0여 명이 인구아동국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명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인구아동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이명수 위원 그래서 딱 부러지게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관리하고 평가하고 점검하고 하는 전담 인력이 얼마나 작동되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정부가 절실한 과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건데 제대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직접 관련되는 인력을 한다면 출산정책과하고 인구와 관련된 분석평가과 또 인구정책총괄과, 3과가 약 한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대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 순환에 따라 계속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전담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또 하나, 저출산·고령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총 몇 개쯤 돼요, 대략 법률 수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

○이명수 위원 제가 처음 질문을, 안 할 것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한 20여 개 된다고 합니다.

○이명수 위원 20여 개 넘어요. 제가 어림잡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법률하고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법안심사권은 없지만 여기서 논의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걸 작업을 해 가지고 하나의 교과서, 하나의 텍스트북을 만들어야 돼요. '저출산·고령화를 하려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놔야지요.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만 하는데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능,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도의 처를 만들 것이냐, 복지부가 그냥 계속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런데 별도의 부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시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복지부가 계속 하는 것을 원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지금 복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좀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R&D 기능, 보사연이 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한 이게 어디 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벌써 이게 수년 전에 연구를 다 했는데 연구는 연구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사연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단순히 연구만 끝내지 말고 그분들의 연구와 정책 결정과 정책 선택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책 집행, 이 정책과정 전체를 전문가가 뒤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뭐를 보완하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즉시즉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5년짜리 기본계획 만드는 데만 끝나지 말고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런 판단 느끼지 않으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사연의 박사님들이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세울 때도 1년 내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민간의 참여가 미흡한 거예요, 민간의 참여.

지금 저출산·고령 관련 민간 NGO가 몇 개쯤 됩니까, 대략?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제일 큰 기관은……

○이명수 위원 인구가족협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인구협회가 가장 큰 조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대략 100개, 200개가 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한 20여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해 줄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혼자서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저출산·고령.

그다음에 또 하나, 기본법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출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인구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인구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인 답변 하지 말고 양성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딱 하셔야지요.

자꾸 제가 답변이 안 되는 것만 물어봐서 좀 미안합니다만 좀 더 이것 보완을 하세요.

행자부차관께 물어볼게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명수 위원 여기에 나오는 센터 있잖아요, 거점 센터. 이것 또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건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다문화이주민 센터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수 위원 조금만, 1분만……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신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묶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원스톱 거점센터가 뭐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명수 위원 그걸 통합한다, 그건 좋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거를 또 만드냐 이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춘희 시장도 그런 얘기인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으면 아예 그 계획에 넣어서 통합적으로 지어도 좋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명수 위원 제발 이 센터 좀 줄이십시오. 지역에 센터가 10개가 넘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

○이명수 위원 일자리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센터를 기능적 통합과 장소적 통합이 다 필요해요. 센터 자체는 필요한데 장소적으로 너무 중복되어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출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비영리민간단체도……

○이명수 위원 금년에 얼마예요, 총 지원하는 게?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금년에 아직 저희가 선정은 안 했는데 예산은 좀……

○이명수 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명수 위원 60억밖에 안 돼요, 총?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번에 30억이 감액이 돼서 한 6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수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저출산 관련 지원 분야 항목을 따로 넣을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여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번에 포함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명수 위원 얼마쯤 배정이 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저희가, 한 6개 유형이니까 그것은 민간단체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최대한 가용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이명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민간단체한테 이번에 행자부가 이런 지원을 하니까 여기에 신청해서, 당신들 더 열심히 하려면 신청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좀 권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 금액을 알아야 권고를 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금액은 지금 대략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명수 위원 일을 확실하게 좀 챙기십시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특위에서 그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김성렬 차관께 질의합니다.

출산 지도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현재 내렸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부터 차관님께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행자부의 입장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식의 전환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산 지도 건은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김성식 위원 핵심만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정부가 제공하는 데 대해서 가장 불만과 반발이 많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표현 자체가 '가임기'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첫 번째 논란이 되었을 때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문을 게시하면서 '통계청 자료 활용에 제공한 것이다', 특히 '제공한 정보의 일부로 인해 논란이 일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적시하지 않고 논란이 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때 초기……

○김성식 위원 정확한 반성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다 내리고 서비스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자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저출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것을 반성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들에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출산 지도 관련해서는 거듭 행자부, 정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뿐만 아니라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부터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과 연관된 각종 정책적 사항들 혹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기타 또 결혼 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출산율에 더 중요한 정책적 요소라는 점을 정부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그런 관점으로 행자부도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출생률 이런 통계만 제시했는데 그러지 않고 양성 평등적 관점 또는 여러 가지 범정부적인 정책, 지자체의 세부적인 그런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여자를 애 낳는 도구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통계 자체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라면 누가 안 낳겠습니까?' 이 댓글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연관해서 지자체의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좀 하겠다고, 합계출산율을 반영해서. 이 내용이 오늘 자료, 보고에도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보여 주기인 건지, 또 실제로 저출산과 관련된 책임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있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연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좀 불확실해요.

지금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가 1년에 총 얼마쯤 됩니까? 여기 3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보통교부세는 한 3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정 수요 부분은 지자체에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처음 금년에 출산율 부분을……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저희가……

○김성식 위원 보통교부세의 보정 수요를 조금 차등 반영함으로써 합계출산율로, 그것을 보고 지자체가 출산율에 대해서 보다 역량을 쏟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고 보느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저희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의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런 것은 보여 주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을 하기보다 실제로 좋은 사례가 발굴되면 그것이 중앙정부가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에 네트워크적 확산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은 실효성도 불확실하고 어떤 정책 때문에 합계출산율의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그게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지역적 로케이션(Location)이라든가 도시의 특성 때문에 생긴 건지도 불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

보십시오. 오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율 비교, 전체 1.2명인데 취업한 사람은 0.7명, 아무래도 취업한 사람이 초기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다는 것과 그런데도 취업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4명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양한 출산 환경, 보육 환경 이것을 직장이 어떻게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봐야지 무슨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자녀에 대해서 하거나 혹은 출산장려금 형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과연 맞는 것인지, 체계적인 보육과 출산에 대한 인프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논란거리잖아요. 첫 자녀부터 불편하지 않게 아기를 키울 수 있어야 둘째 셋째를 낳는 건데 둘째 셋째 혹은 넷째 낳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준다는 방식의 접근, 이렇게 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첫째 둘째에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셋째 넷째에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뻔히 알면서 지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출산장려금 형태 혹은 다자녀 인센티브 형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두 부처가 좀 체계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고, 첫 자녀부터 출산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을 강화해 나갈 때 둘째 셋째도 커지는 거고 그럴 경우 조금 더 아이를 많이 낳은 분들에게 조금 더 대책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자녀 위주로 정책이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문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어쨌든 저출산 정책이 워낙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을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딱히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각 부처가 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개별적인 사업 가지고 이게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름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갈 때에 재정적 동기가 뭐냐 하면 돈이 적으니까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그렇게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집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반복적으로 되어 오니까, 저출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는 계속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투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

브가 갖는 제도의 허점들에 대해서 주무부처들이 잘 보면서 재정당국이랑 정책을 설계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정부 차원의 기구에서 논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근본적인, 첫째 둘째 중심으로 예산 투입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크니까 안 하면서 생기는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문제는 그것이 설사 조금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이 안 가도록 주무부처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를 포함해서 1만 개의 시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책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쪽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분석을 못 했습니다, 행자부도 역량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복지부나 전문기관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한번 발굴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동평가에도 좀 반영을 하고. 그래야 지자체가 이게 이 쪽에만 돈 넣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방 차관님도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심층 평가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연구결과를, 외국에서의 연구결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 문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책을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입증하는 데,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연구가 많지 않느냐……

○김성식 위원 아니, 차관님, 다자녀 인센티브 프레임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한 고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정책이 계속 가게 돼 있으니 주무부처로서 근본적인 재정투입에 대해서, 다자녀 중심 인센티브가 아니라 전체적인 출산 여건들을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첫째 자녀부터 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보다 많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정부 출신이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을 통해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접근할 거냐 하는 것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선택을 하려면 에비던스(evidence)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찾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한 에비던스가 명확하지가 않은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정책을 선택하면 이게 지속되고 몇 년 동안은 이게 유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책 당국자로서의 고심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0초만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성들의 주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게 해 주면 둘째 셋째 넷째 낳습니다. 셋째 넷째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정책보다 첫째를 낳아도 좀 잘 키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사이트의 주된 의견들이에요.

차관님, 참고하실 것을, 또 이 점을 유념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위원장이자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부분, 결국 그것은 전체적인 출산의 문제, 보육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종 기본정책이 그렇게 수립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 아까 다자녀 카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장애인 우대카드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이부터 낳기 좋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육아지원이라든지 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 다자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인센티브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다자녀 카드를 최교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도 조금씩 다르게 주고, '부산의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왜 서울은 없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다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그것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작은 정책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어떠냐, 그래서 정책의 목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잘 키우게 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지만 또 다자녀 카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장애인 카드를 많이 옆에서 사용하다 보면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방문규 차관님 그리고 김성렬 차관님, 고령화 대책은 없나요, 오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오늘은 다자녀 관련된, 카드 관련된 보고를 요청하셔서 고령화 대책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다자녀 카드 관련돼 가지고만 오늘 하기로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왔는데요?

○위원장 나경원 그것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지요. 그것만 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나경원 아니,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토였지요.

○임이자 위원 아까 방문규 차관님 모두말씀에서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청년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자료에도 간단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공부문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매년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임이자 위원 차관님,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말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와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것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다음부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아까 공공에서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공기업 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고용할당제 3%를 못 채우고 있는 공기업이 23%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제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민간 기업이 따라갈 것이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기는 있으신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단기적인 것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노동력에 포커스를 맞추었을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해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했을 경우에 중기적인 대책은 뭡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게 20년, 30년 정도를 바라보면 결국은 이민제도를 개편한다거나 그런 정책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해소해서 임금이라든가 경제적인 생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휴인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전업주부로 계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 유휴인력과 고령자 유휴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민정책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됐을 경우에 인구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리가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래서 거시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저성장시대에서 일자리가 빵빵 떨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12시간 하도록 돼 있는데 주 35시간이라도 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야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거든요. 기업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26조, 50조 갖다 쏟아 부어도 대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대책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대책이 아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안타깝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근로자들 연차휴가 많이 쓰고 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걸 적치해 가지고 1년 2년 3년 되면 이게 40일, 50일 될 수도 있고 60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휴가를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하고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무엇보다도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인력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임이자 위원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고를 쉽게 시키겠다는 얘기이고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고용 형태도 나누어서 일자리를…… 그렇게 해야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격차를 시정해야지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반 소기업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이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자녀 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1.21에서 2로 넘어가는……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게 되면 지금 한 자녀가, 최근 5년 동안 결혼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 보게 되면 한 자녀를 둔 부부가 한 47.9% 정도 되고 두 자녀가 15.9%고 세 자녀가 0.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자녀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다자녀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3명 이상으로 모든 게 보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자금 지원도 세 자녀 이상이고 모든 부분들이 세 자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도 세 자녀로 되어 있는 다자녀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제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요.

보건복지부차관님, 사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방위적인 문제라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주무부서가 노동부나 법무부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깊이 알기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저출산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 범부처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고 또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각 부처의 추진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꾸렸지만 예산을 엄청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모든 보육정책이나 일반적인 정책들이 혹여라도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관계된 예산이면 다 모아 놓고, 정책이면 다 모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자체를 특화해서 고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죽 해 왔던 보육정책, 기존에 죽 해 왔던 일자리정책, 기존에 죽 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고 그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러는 게 훨씬 약해지는 역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소관부처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보다 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냉정하게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기왕에 결정된 것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을 정리해 내고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는 것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부분만 집어넣어서 해야 이게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안행위에서 이미 출산 지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의 관점 또 노인의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전에 투여되는지,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되고 이러는 것에 앞서서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투영돼서 점검돼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이게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논의를 미리 했어야 하고 그것이 걸러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된 걸까요, 행자부차관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 개 정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고객집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로 공무원과 또는 단체장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간 지역단위에서의 거버넌스는 필수적이겠다……

○진선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자체에 책임을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자체에 대한 책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책임을 묻는 부분이 아니고요.

○진선미 위원 출산 지도에 대한, 행자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그 부분들은 오히려 실제로 노력하고 뭔가 실천을 하는 것이지만 행자부는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출산 지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국민들 또는 관계되는 분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출산 지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비추어진 문제점이 전체적인 여성이나 노인이 대상이 되는 이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를 들면 성인지적 관점 이 부분들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반성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합계출산율이라든가 가임기 여성 비율이라든가 아주 단편적인 일부 그런 정보만 가지고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저는 행자부에서 사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발굴하게 하고 그것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캠페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심이 되어야 될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들을 발굴하기에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문을 다 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방재정특위 따로 꾸려서 거기서 지방교부세율 이런 것들도 조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기재부 다 반대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의견들을 점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특위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은 이것이 안을 들여다보면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태 때문에 대선이 굉장히 가깝게 되고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각각 저마다의 정책들을 고민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고민하고 정리해서 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인 고민들이나 이런 것과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은 총괄기구를 미리 신설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그 뒤에 그분들의 고민들에 의해서 이게 개편되게 되면 이중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행자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저는 위원님 진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소위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나 이런데 연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기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진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어느 대선 주자시든 국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 대책의 수정, 보완, 확대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현 시점이.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충격적인 방안,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면 취업한 사람의 평균 자녀수가 0.7명 그리고 공무원은 1.4명, 이렇게 공무원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건의랄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무원의 경우 또 공기업, 공공 분야 등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곳에 '출산 시에 불이익을 안 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축하를 해 주고 최대한 우대를 해 줘야 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면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대를 해 줘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든지 '직장 생활하는 데 임신하니까 참 좋다, 출산 갔다 오니까 엄청 대접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출산 때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안 준다 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게 뭔가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정책이 확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민간으로도 전파가 되어서 확산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민간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두 부처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고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애기입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 확충,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그럴까, 이것 조금 늘렸다 그러면 늘렸나 보다, 이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피부에 와 닿는 '애 낳으면 1000만 원 출산장려금 준다', 지금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합니다. 엄청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주면 산후조리원…… 우선 애 낳으면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산후조리원 어떻게 가느냐, 돈 없는데.

그래서 찔끔찔끔 세제 혜택 몇십만 원, 뭐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삼모사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돈이 많다고 애를 낳는 건 꼭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기서 보시다시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입이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소득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정책,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다고 애 낳는 것 아니고 집이 있다고 애 낳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애를 낳으면 집을 준다, 그래서 주택정책도 출산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대접 받는 나라,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무조건 집 준다고 출산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해야 집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혼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결혼을 안 해도 동거하는 부부도 있고 하니까 출산을 하면 혼인신고 안 되어 있더라도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정책이 애를 낳아야, 출산을 해야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직장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을 다 할 수는 없다, 국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법무부의 이민정책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민정책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모든 정책이 출산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고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번 최순실 청문회에서 재벌 회장들 왔을 때 대기업 회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잘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유착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정말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제가 강조했는데 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그렇게 해 주면 저출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롯데에서 당장 남자 직원의 경우 부인이 출산하면 1개월 유급 육아휴직 그리고 여성 직원의 경우는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처럼 이걸 어떻게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느냐, 우선 공무원 1.4명이니까 공무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각성의 문제인데, 보면 25년도에 71만 명입니다, 통계 시작한 25년도에. 26년도에 66만 명, 1939년, 40년에도 80만 명, 70만 명인데 금년에 40만 명 아닙니까? 금년에 저는 한 43만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40만밖에 안 됐다는 것이. 내년에는 30만대로 가면……

그리고 1페이지의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자수가 갈수록, 이게 가임여성이 되는 겁니다. 가임여성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1.4, 1.3 유지되어도 이제는

30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차관님도 다시 한번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최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출산 전도사시군요, 특위까지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께 기본소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는 유럽 국가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자 2000명에게 월 70만 원, 유로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은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물론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요. 복지체계에 대변혁적인 기본소득은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본소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복지부가 어떤 연구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는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채택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저희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자료와 연구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어서 기본소득의 작은 기본소득인 청년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기본소득 실험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경우 복지부하고 실무진과 거의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갑자기 전면 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최순실 국정 농단 과정에서도 보던 장면인데, 갑자기 변한 게 장관의 결단인지 아니면 보다 윗선의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남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먼저 발표된 것에 따라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가……

○인재근 위원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협의 과정 중에서 선후가, 협의를 마치고 나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 도중에 있는 사항이 발표가 되고 해서……

○인재근 위원 그래서 이미 서울시는 일부 실행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인재근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기본소득이 적은 거로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기대선이 유력하지요? 문제는 인수위라는 정책 조정 기간이 없다는 것인데 정책 혼선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각 부처도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차기 정부에서 채택이 유력한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정 혼란도 줄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보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우리 특위의 논의만 보아도 아동수당은 저출산대책으로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특위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차원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도 각 당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

기에 관련되는 자료와 그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주로 하지만, 어르신 물리치료비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의원급 이용 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하면 30% 정률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찰료와 처치료, 검사비와 같은 진료비가 3.1%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지난해 1500원만 내면 되던 물리치료에 올해는 3배 넘는 4500원, 4600원 내는 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진료 행태 왜곡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기준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든가, 노인 본인부담금을 일부 국고에서 보조해 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지적대로 노인 외래 정액제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또 의료단체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신중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우리 도봉구만 해도 노인 인구가 많아요. 굉장히 호소하셔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행자부의 김성렬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계속 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가임기 여성지표 통계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이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뭐가 잘못되었나, 이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못 다가간 게 아니고, 핵심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성평등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꼭 행자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한 이 가임기 여성 수치가 원래 지난 8월의 저출산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동향조사 6종 하라고 한 것 중의 하나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행자부는 그것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출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이게 여성 3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언뜻 보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여성들이 낸 정책인데, 우리도 참 곤혹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 훨씬 성평등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자체에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정책이 곧 출산 대책이다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리셋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행자부에서 인사혁신처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공동으로 적어도 저출산 대책 담당 공직자들만이라도 이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에 이 성평등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추진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저출산 대책 자체에서 성평등한 정책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가, 이번에 예를 들면 지역별 육아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내지는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각 지자체마다 결혼·임신·출산을 여성들이 왜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이러이러이러하게 우리 지자체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시가 되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여쭙고요.

똑같이 방 차관님에게도 이 저출산 대책의 원인 부분에서 성평등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보실 생각은 없는지를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일괄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번째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방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문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권미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다시 구축하라라는 의미로 그때 결의문을 했고, 또 그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이상의 전담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답으로 나온 게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그다음에 국가정책조정회의 활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언뜻 보면 이게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기능과 권한 모든 면에서 여전히 이 저출산 정책을 그냥 단순 조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좀 개선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실무 총괄하던 것에 비해서 이것을 하면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국가정책을 총괄 기획 컨트롤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구처하고 인구안정처 그리고 개정 의견으로 인구전략처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나마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셔서 다음 정권에 이 저출산 대책 부분을 넘겨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형식적이지 않은, 어떤 고민의 결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나와 있는 인구안정처나 인구처, 인구전략처 같은 이런 새롭게 신설되는 전담 총괄기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3쪽에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기회'에서 '일·가정 양립 연계 빈 일자리 25만 플러스알파 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권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뭔지도 같이해서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성평등 원칙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하고 성영향평가 등도 고려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할 때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가 다음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협회·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한 십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TF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획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 조직도 좀 연계해서 강화를 할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빈 일자리 25만 개'가 아니라 '2.5만 개 플러스알파' 대책인데요. 공공 부문에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임신 기간이 되면 근로시간을 약간 강제적으로 좀 줄여서 그 남은 시간은 신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것을 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게 되면 공공 부문에서 한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공공 부문에서 적어도 출산기의 여성 직원들 또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 또 시간제 인력 활용하는 것

의 목표치를 2.5만 개 플러스알파로 설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어서 저희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교육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기관이나 여가부하고 협업해서…… 전국에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지도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둘러서, 몇 가지 이런 단편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 그런 관점을 적용해서, 예컨대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또 가사분담률, 육아휴직 비율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도 하고 또 보육시설, 분만시설 등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들, 또 심지어는 지역별 집값—지금 주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요인들을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부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컨트롤타워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은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도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 복지부를 크게 나누어 보면 보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특임장관을 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안들이 나와 있는데 별도의 전담 부처를 또는 위원회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런 안들은 기존의 복지부나 여가부나 고용부나 관련 부처의 기능 조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행자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 지도 작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7월 28일 날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그다음에 8월 10일 날 실무과장급회의 또 8월 18일 날 관계부처 차관회의, 그래서 8월 25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의견이 나온 것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특별히 반대 의견이나 이런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실무 협의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금태섭 위원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일본의 RESAS(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의 사례를 유사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여러 가지……

○금태섭 위원 우리가 만든 출산 지도 같은 것이 해외에도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해외에도 꼭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찾아봤고, 참고도 좀 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RESAS는 그 지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립해 가지고 지역종합전략을 수립·시행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지 저출산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업, 지역경제 순환, 농림수산업, 관광, 소비 그리고 인구 지도가 있는데, 인구 지도는 인구 구성, 인구 증감,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의 사회 증감, 미래 인구추계 이런 것이지 가임기 여성 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이게 기안이 된 것인가요, 출산 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출산 지도는 저희가

특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지역별 출산·양육 지원혜택들을 그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그 정보를 일차적으로 모았고, 그다음에 너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들을 넣었는데, 이 가임기 여성 인구 숫자는 합계출산율의 분모에 해당되는 숫자여서 저희가 따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보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것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신중치 못했는데, 다만 그 숫자를 넣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 합계출산율이 우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가임기 여성 숫자이고, 그 분자가 그분들이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을 해 드렸는데, 합계출산율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앞으로도 이 가임기 여성 숫자가 나오는 지표나 지도를 계속 낼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 맵은 내렸고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1차 1월 5일 날 전문가 의견을 들었더니 전반적으로 '가임기 여성 숫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계속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생각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금태섭 위원 복지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카드를 도입할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지자체에서 나오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자체별로 발급 기준이 제각각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는 두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세 자녀 이상부터 발급이 되는 등 이렇게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또 혜택도 다르고, 발급 나이도 서울·경북은 막내가 13세 이하, 경기는 막내가 15세 이하, 강원도는 막내가 24세 이하, 부산·울산은 2000년 이후 출생일 때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는데, 정부에서 다자녀 카드를 도입하기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 기준에 대해서 통일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이 좀 많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카드로 일원화하기 전에 우선 중간 단계로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다자녀 카드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20% 할인이 되고, 경기는 10%에 그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가가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당장 통일은 못 하더라도 혜택의 최저선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이 여러 가지 요

인들이…… 가맹점의 유형·형태,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어디는 좀 할인율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기가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일단 공지를 해서 알려서 지자체별로 노력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 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서울에서는 20%를 해 주면서 왜 우리는 10%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자녀 카드, 행자부는 지자체에 출산금 지원 등을 주요 지원책으로 많이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 방안은 결국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 차원을 넘어서 경제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차관님, 1월 초에 모 방송사의 '아빠의 전쟁'이라는 스페셜 다큐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저도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거기에 보면 스웨덴 육아휴직제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커피 한 잔 들고 유모차 끌고 여유 즐기는 이런 아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3개월까지 급여의 80% 지원하고, 육아휴직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육아휴직에 미온적이었던 아빠들의 생각과 생활이 결국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은 되어 있지만 급여의 40%에 불과해서 거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회사와의 유대감을 근무시간과 야근을 통해 보여 주는 문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지만 독일은 1371시간으로 742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독일은 노동시간은 적지만 노동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근무시간의 길이와 노동생산성이 관련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노동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 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긴 노동시간만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6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잠을 많이 잔다'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스웨덴 초등학생들은 아빠와 여행을 다녔던 추억과 아빠에 대한 사랑뿐이라는—이런 참극과 극입니다—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우리나라 아빠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육아휴직제도 도입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인식 개선 방향 이런 부분…… 잘못된 근무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은 아이들 부모한테 집을 제공하고, 롯데그룹에서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국회 비서관의 하소연을 들어 보니까 부부 둘 중의 한 사람이라도 정시 퇴근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 하면 대체근무자 바로 고용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내의 대체인력 고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

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 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대책 업무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 발굴,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성과는 어땠는지? 어떤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지만 차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엠블럼·슬로건 공모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 응모 작품이, 가족의 소중함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에 상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청년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자녀 채용 우대 방안 검토나 출산 친화적 일자리창출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것인지 이런 부분……

행자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안을 주셨고 하셨지만 역시 지난해의 저조한 출산율이, 많은 대책을 했지만 어쨌든 지난해의 출산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것 교훈 삼아 가지고 그 계획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래서 보완점을 파악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보다 깊이 연구해 주셔 가지고 정책 수요자들인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혹시 아니었는지,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대책도 쭉 내놓으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선 근로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육아휴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치가 입증을 하는데, 취업자 평균 출산율이 0.7인데, 공무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2년간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1.4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제도 또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이 출산율에 유의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대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상한을 더 올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남성의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17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강화하고 그럴 예정인데……

우선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15년도에 5% 정도였고, 그것이 조금 홍보를 해서 16년도 12월 현재는 한 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거의 한 2배 수준인 15%까지, 2020년도에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지금 전혀 없고요, 통상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도 지금 육아휴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을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민간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들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시키면 그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24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그 중소기업에서 최초 1인을 육아휴직을 시키면 12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4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17년도부터 그렇게 지원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실은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것들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홍보예산 또는 여기 지원예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야가 따로 없는 그런 과제인 만큼 좀 더 특위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올해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처로부터 종합적인 계획들 또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올해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전체적인 종합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임이자 위원님 일찍 이석하셨지만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고용 부분, 노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고를 받고, 현재 어느 정도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지 부처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보고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제별로 이렇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실이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주시면 이것을 담아서 부처로 하여금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저희가 여러 번 논의했는데, 간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간담회 주제나 이러한 부분 내용을 주시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훌륭한 고견에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님 그리고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반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정의 혼란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께서 묵묵히 정해진 일들을 잘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장 나경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미혁	금태섭	김성식	나경원
박광온	윤종필	이명수	인재근
임이자	장제원	진선미	최교일
홍의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	심덕섭
지방행정정책관	채홍호
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노인정책관	김헌주
보육정책관	고득영
연금정책국장	장재혁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2017.1.18.